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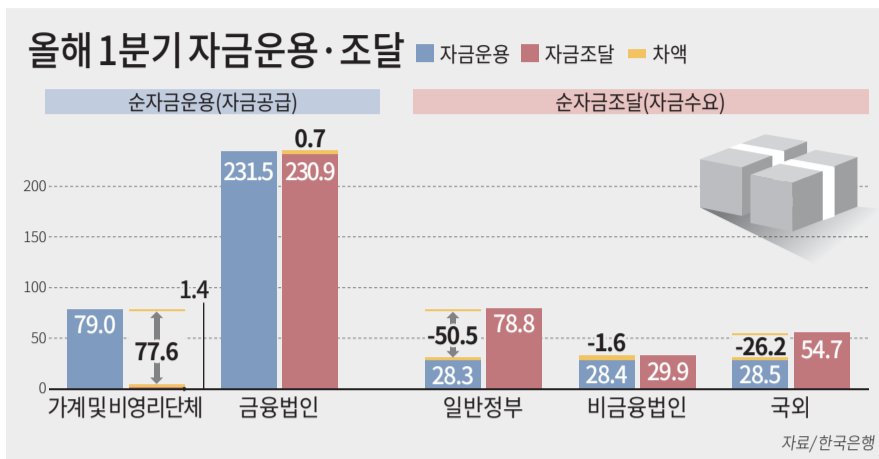
부동산 등 실물투자 줄어... 가계 여윗돈 47.8조 늘었다

한은, 1분기 자금순환

가계·비영리단체 순자금운용 77.6조
가계 자금조달액 1.4조, 크게 줄어
주담대 증감액 15.2조→12.4조로
기업 여유자금 -6.9조로 줄어들어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가계의 여유자금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47조 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늘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한 경우가 줄어든 영향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유자금은 주로 예금에 몰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은 77조 6000억원으로 3개월 전과 비교해 47조 8000억원 증가했다. 순자금운용은 예금, 채권, 보험, 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조달)을 뺀 금액으로 경제체계의 여유자금을 말한다. 즉, 가계의 여유자금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정진우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통상 1분기는 상여금이 들어와 여유자금이 증가하지만, 올해 1분기 가계의 여유자금(순자금운용규모)은 지난해 1분기(85조 6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가계의 여유자금 중 자금조달 부분은 실물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1분기에는 분양물

량이 많지 않아 실물투자에 흘러 나간 자금(금융기관 대출금)이 줄면서 여유자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가계 자금조달액은 1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9조 2000억원)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같은기간 15조 2000억원→12조 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가계의 자금운용액은 79조원으로 전분기(39조원)와 비교해 2배가량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은 58조 6000억원으로 전분기(18조 4000억원)와 비교해 40조 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권은 7조 3000억원→12조 4000억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13조 1000억원→2조 9000억원으로 늘었다.

정 팀장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이들이 늘었다”며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채권에 투자하거나 위험 대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주식으로 투자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일반기업(비금융법인)의 여유자금은 -1조 6000억원으로 전분기(-6조 9000억원)와 비교해 축소됐다.

기업의 자금조달액은 29조 9000억원으로 전분기(31조 3000억원)와 비교해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회사채 발행여건이 개선되면서 채권이 순발행으로 전환됐지만 상거래 신용이 줄면서 조달규모가 축소된 영향이다. 대출, 채권, 주식 발행액은 각각 8조 3000억원, 10조 5000

억원, 11조 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의 자금운용액은 28조 4000억원으로 전분기(24조 4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었다. 상거래 신용이 줄었지만, 금융기관 예치금이 증가하고 채권도 순취득으로 전환됐다.

일반정부의 여유자금은 -50조 5000억원으로 전분기(8조 6000억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금융기관 예치금, 정부유자 등이 증가하면서 자금운용액은 28조 3000억원을 늘었지만 자금조달액이 국채발행, 금융기관 차입이 크게 늘면서 78조 8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편 가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3배로 전분기(2.25배)보다 상승했다. 금융자산이 5326조 2000억원으로 122조 1000억원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가 2317조 5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영향이다. 한은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1%를 기록해 전분기(93.6%)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인프라·원전 등 해외수주 위해 5년간 85조 투입

최상목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초대형 수주 프로그램 신설 등 금융수단 다각화 적극 추진할 것”

정부가 인프라·원전·방산 부문 해외수주를 위해 올해 15조 원 투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85조 원을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대형 수주 프로그램 신설,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K-파이낸스 패키지 개발 등 금융수단의 다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공급망 기금 출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 확대 등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충했다고 말했다.

‘K-파이낸스 패키지’란 이 같은 수출입은행 금융과 EDCF, 공급망 기금을 패키지로 묶어 중점 협력국과의 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형 개발사업 협력, 공급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은의 기능을 강화해 ‘수출입’을 넘어 ‘국제협력’ 금융기관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앞장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통상협력 추진 전략과 관련해 “글로벌사우스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인도-태평양 핵심국가와 연대를 강화해, 더 넓고 보다 촘촘한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특히 자원부국인 신흥국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수출·수주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

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간(G2G)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남아시아 3국 국민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핵심광물, 에너지·인프라 등 5대 핵심분야 이행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한 아프리카·중남아시아 국가와 관련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교역·투자 확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인프라사업, 개발협력 등 주요 분야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지붕은 별 좋을 때 고치라”는 격언을 인용해,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지금이 대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에 발생할지 모를 태풍급 대외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성장 사다리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발짝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1면 ‘새 수출 동력, 전력...’서 계속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해 세계 최초로 구현한 1MW급 상용용 건물 직류(DC) 배전시스템과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올해 수출·수주 목표 182억 달러 달성하면 韓 수출품목 10위권”

올해 수출 목표인 수출액 162억 달러, 수주액 20조원을 달성할 경우, 전력기자재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품목 10위권에 들어간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력 기자재 시장 슈퍼사이클이 열렸다”며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수출 목표를 162억 달러로 설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전력 공기업과 수출지원 공기업은 ‘K-그리드 수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력기자재 산업을 수출산업화 선도 모델로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전력기자재 품목 무역보험 특별 우대프로그램을 마련해 2조 70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전력기자재 수출 촉진방안’을 수립해 생태계 경쟁력 강화, 수출협업체 결성, 연구개발 확대 등 종합 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교육부, 3년간 의대교수 1000명 증원 추진

의대생들 집단유급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방안’ 마련키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수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향후 3년간 1000여명의 전임 교원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각 대학 의대는 이르면 내달부터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

정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의 대학별 자료 확인, 정원 배정 이후 교육여건 개선 수요 조사 등 세 차례에 걸쳐 각 의대의 교육 여건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5년간 매년 2000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특히 경상국립대·경북대·충북대 등 일부 국립대 의대는 기존보다 2배~4배가량 증원되면서, 정부가 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지원 TF 관계자는 “정원 증원

규모가 큰 국립대 의대의 충분한 교수진 확보를 위해,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전임교원 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의 교육여건, 지역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별 정원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의 교수 채용 절차는 내달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에서 보유 중인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도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15주씩 총 두 학기로 나눠 수업을 진행하며 ‘유급’과 ‘개설 과목’ 기준을 마련하던 학기제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lhj@